

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A Study on Responses of the Korean kidnapping Terror in overseas

정준식* · 김원기**

〈목 차〉

- | | |
|-----------------------|-------------------------|
| I. 서론 | IV. 한국인 해외인질납치 사건의 대응방안 |
| II. 테러집단에 의한 인질납치 유형 | V. 결론 및 제언 |
| III. 해적행위에 의한 인질납치 유형 | |

〈요 약〉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과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선교봉사단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의 한국인 관광객 폭탄테러사건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선박과 함께 한국인의 인질납치 사건(동원호 납치사건, 마부노호 인질납치사건 등)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질납치는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고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의 인질납치사건을 분석하고 종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국민의 안전과 국가위기의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예방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에 대한 예방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

* 동서대학교 경호학과 겸임교수(제1저자).

** 동서대학교 레포트과학부 경호학과 교수(제2저자).

하다. 둘째,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재차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인은 대내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 고취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주제어 : 인질납치, 해적행위, 테러, 말라카해협, 아덴만, 대응방향

I. 서 론

오늘날 국경 없는 경제 발전,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의 가속으로 약 700만 명의 재외국민과 선교, 기업 활동, 여행 등 약 1,300만 명의 국외 이동 국민수를 포함하여 약 2,000만 명에 달하면서 한국인의 활동영역은 점점 커지고 있다(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¹⁾. 그러나 그 이면에는 테러와 같은 다양하고 복잡한 위협의 증가라는 문제들이 수반되면서 국제테러집단과 공해상의 해적집단에 의해 해외 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라는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참사 이후 테러와 대(對)테러의 명분 속에 테러범들의 공격 목표가 국가의 주요 요인의 암살 납치·해외공관·군사 및 경제시설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보다 공격하기 쉬운 대중교통수단·학교시설·평범한 휴양지·관광 위락시설 등도 테러의 표적이 되면서 세계 곳곳의 테러사건은 해외 한국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인질납치는 전통적 테러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더욱이 테러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탓으로 세계적으로 인질 납치 사건 자체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으며,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무장 세력의 피랍사태, 2009년 3월15일 예멘 자살폭탄테러 등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의 인질 납치 피해사태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해외 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선교사만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분쟁지역과 오지 등에 보내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해외선교사 파송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이슬람근본주의자들과 종교적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아프간 피랍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문화일보, 2007.8.10). 또한 동남아시아 말라카해협이나 아프리카 아덴만 등 공해상의 위협 해협에서는 해적집단의 국제적인 인질납치가 급증함에 따라 실제 해상운송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 위협도 그만큼 높아졌는데, 2006년 4월4일 동원호 피랍사건(117일간 억류), 2007년 5월15일 마부노 1·2호 피랍사건(174일간 억류), 2007년 10월27일 골든노리호 사건²⁾, 2008년 9월10일 브라이트 루비호 사건(37일간 억류) 등은 대표적인 피해사례이다.

해외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는 인질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모든 라인을 동원해도

1) 2008년 지역별 재외국민 현황을 살펴보면 구주지역 655,934명, 북미지역 2,242,369명, 아주지역 370,172명, 아프리카지역 8,399명, 일본지역 629,236명, 중국지역 2,761,954명, 중남미지역 107,484명, 중동지역 9,340명으로 총 6,784,888명이 집계되었다 www.mofat.go.kr).

2) 2007년10월 28일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일본 선적 골든노리호에는 한국인 2명이 탑승했었지만 이중 1명은 바다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하여 귀국한 바 있다.

해외라는 상황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변 강대국 간의 복잡한 국제관계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인질납치사건의 성격상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연구, 시도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인질납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최근 국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질납치사건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해외 인질납치사건 발생현황 및 사건 종결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 국가위기 상황 및 그에 따른 교훈을 다시 인식하며, 한국인 해외 인질납치사건의 대응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적행위가 한국인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직접적인 인명살상, 인질납치 및 재산피해 및 국제사회에 위협과 공포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테러의 전략적 수법에 해당되므로 한국인에 대한 해외 인질납치테러 범주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 국내외 서적, 연구논문 등의 선행 연구자료 등의 2차적인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한국인 해외인질납치사건에 대한 내용 분석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인터넷과 뉴스매체 등의 자료에 의존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심도있는 자료접근에는 한계를 두고 있다.

II. 테러집단에 의한 인질납치 유형

1. 인질납치 개념

인질납치에 대한 개념은 인질 혹은 납치를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되거나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인질납치에 관련 된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인질역류를 의미하는 Hostage Taking, 유괴 혹은 납치를 의미하는 Kidnapping, 항공기 납치를 의미하는 Hi-jacking, 해상에서의 선박 납치를 의미하는 Sea-jacking, 그리고 육상교통 수단에 대한 납치를 의미하는 Car-jacking 등이다.

Hostage Taking은 인질범이 경찰 혹은 대응당국의 병력에 의해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으로 범죄주체의 도주로가 차단된 상황을 의미한다. Kidnapping의 경우는 인질범과 인질의 위치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은밀하게 억류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동함으로써 대응당국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건을 의미한다. 인질납치사건은 특정인 또는 불(不)특정인을 유괴 또는 납치하여 억류시키거나 시설물의 사용자 및 교통수단 탑승객들을 억류시킨 후 납치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찰시키기 위해 매개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건을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인질납치라 함은 “정치, 사회, 민족, 종교, 금전 등과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람을 납치, 유괴, 감금 혹은 억류한 후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적 국가, 관련 국가 또는 대응 당국에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최진태, 2008: 331).

2. 인질납치 목적

인질납치를 자행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요구 달성이다. 인질납치는 남미의 혁명분자들이 1960년대 초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수감된 동료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인질을 이용하여 정치적 선전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전술이다(김두현, 2004: 105). 인질납치는 다른 테러수법에 비해 위험부담이 아주 적으면서 정치적 선전효과는 상대적으로 무척 높기 때문에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의 하나로 등장했다. 2007년 7월 19일에 시작되어 40여 일간 지속된 한국인 아프간 인질납치테러 시에 탈레반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조건도 정치적인 것으로 아프간에서의 한국군 철수였다. 둘째, 선행 테러 사건이나 배후 혐의로 구속된 수감자 석방이다. 1970년대에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에 의해 자행된 상당수의 인질납치테러는 동료 테러범들의 석방이 주목적이었다. 1972년에 발생한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 역시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 200명의 석방을 위해 검은 구월단(Black September Organization)이 자행한 사건이었다. 셋째, 테러조직의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인질의 석방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이다. 아프간, 이라크 그리고 소말리아 공해상에서 발생한 인질납치테러 사건 중에는 수백만 달러의 석방금을 지불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넷째, 테러 자행 후 혹은 체포 위협 상황에서 안전지역으로의 도피를 위한 피난처 및 이동수단의 제공요구이다. 뮌헨 올림픽 테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검은 구월단은 그들이 제시한 최초의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자, 인질의 석방 조건으로 아랍국으로 탈출을 위한 항공기 제공을 요구했었다. 마지막으로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의 관심을 끌어 특정사안의 보도 등을 위한 성명서의 발표 종용 및 요구이다.³⁾

3. 인질납치테러 유형

인질납치테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질(Hostage-Taking) 테러와 납치(Kidnapping) 테러이다. Hostage-Taking의 경우 주된 공격 대상은 외교관

3) <http://www.tkb.org/GroupTacticModule.jsp?startDate>. (검색일: 2009. 2. 15).

및 정부 인사, 그리고 기자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외교관이나 정부 인사의 경우 고도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테러조직이 선호했다. 1996년에 발생한 페루 대사관을 점거하고, 인질납치테러를 자행한 테러범들은 쿠바의 최고지도자 카스트로가 망명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선전했으며, 심지어는 일본 방송사 기자 두 명을 페루 경찰 몰래 불러들여 인터뷰를 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최진태, 1997: 192-210).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외교관, 정부 인사에 대한 Hostage-Taking이 점진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이들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 및 경비 대책이 강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러조직은 새로운 연성목표에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Kidnapping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저널리스트 및 방송기자, 외교관, 기업체 소속 근로자 등 인질납치테러의 대상에 대한 구분도 없다.

바리케이드-인질 사건의 경우 대사관 혹은 정부청사 등과 같은 상징성이 높은 시설물을 점거하면서 그곳에서 상주 근무를 하는 사람 혹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행된다. 이러한 유형의 인질 테러는 1970년대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대표적인 사건이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 사건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한 바리케이드-인질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보안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반면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은 1970년대에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인에 대한 납치의 경우 공격 대상에 대한 보안대책이 전무하거나 미비하여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납치를 통해 거액의 석방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납치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테러조직이 기업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질납치테러를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는 경향까지 보이기 시작했다(Clutterbuck, 1987: 14-24).

4. 한국인 해외 인질납치 사례

한국인이 해외에서 피랍되었던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한국인 해외 인질납치사례 1(1986년~2006년까지)

1986.01	레바논 주재 한국대사관의 도재승 서기관이 무장괴한들에 납치됐다가 정부가 몸값을 지불하고 1년9개월 만에 풀려남
1988.02	(주)한양 근로자 2명이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 340Km지점에서 실종 12일 만에 실종지역에서 42Km 떨어진 지역에서 총격으로 숨진 채 발견됨
1991.03	현대건설 근로자 5명이 이라크 키르쿠크지역에서 쿠르드족 반군에게 납치된 후 3일 만에 석방 됨.

1992.09	대우건설 근로자 4명이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 북쪽 200Km 지점에서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된 후 한달여만에 풀려남.
1995.10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 인근에서 현대전자 관광객 27명이 러시아 무장괴한들에게 인질로 붙잡혔다 9시간 후 러시아 대테러특수부대인 알파부대의 진압작전으로 전원 구출됨.
1996.12	1996년 12월, 무장단체 MRTA가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 점거 사건 당시 이원형 대사가 고위급 인사 170여명과 함께 1997년 4월 130일 만에 무력진압을 통해 인질범 전원 사살함으로서 구출됨.
2003. 11.30	이라크 (주)오무전기 근로자2명이 이라크 티크리트 고속도로서 차량 이동 중 피격. 김만수, 광경해씨 피살, 이상원 임재석씨 부상.
2004.04.05	지구촌나눔운동의 한재광 사업부장과 무역업체 직원인 박모씨, 이라크 나시리야에서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사드르 추종 민병대원들에 의해 억류됐다 14시간여 만에 석방.
2004.04.08	한국인 목사 및 선교사 7명,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 250km 지점에서 차량 이동 중 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억류된 뒤 7시간 만에 석방.
2004.05.31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물건배달을 위해 바그다드에서 팔루자로 트럭을 이용해 이동하다 무장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에 피랍 후 6월23일 참수된 채 팔루자인근 도로에서 시신 발견.
2004.08.07	이라크 취재 중이던 외국언론사 소속 한국인 기자 조모씨, 무장 세력에 억류된 뒤 15시간 30분만에 석방.
2005.02.18	나이지리아 교민, 몸값 노린 무장세력에 피랍 뒤 석방
2005.07.28	아이티 교민 서모씨,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몸값 노린 무장괴한에 의해 피랍. 사흘만에 석방.
2006.03.14	KBS 특파원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한 호텔에서 무장단체 PFLF(팔레스타인 해방전선) 소속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에 의해 피랍. 하루 뒤 석방.
2006.06.07	대우건설 근로자 3명, 한국가스공사 직원 2명 등 한국인 5명 나이지리아 유전지대 포트하코트 내 대우건설 현장에서 현지 무장단체인 '니세르델타 해방운동(MEND)'에 의해 피랍. 다음 날 석방.

*자료 : 매스컴자료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

〈표 2〉 한국인 해외 인질납치사례 2(2007년 이후)

2007. 1.10	나이지리아 남부 바엘사주 오구지역서 대우건설 소속 한국인 근로자 9명과 현지인 1명 등 10명이 무장단체에 피랍 후 사흘 만에 석방.
2007. 5.3	나이지리아 유전지대 포트하코트 내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대우건설 소속 직원3명이 현지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 후 6일 만에 석방
2007. 6	한국인 사업가가 필리핀에서 피랍되어 감금, 고문당하다 현지경찰에 의해 5일 만에 구출됨.
2007. 7.19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활동 중인 한국인 23명이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 중 탈레반 집단에 의해 피랍, 그중 2명 살해, 43(8.30)일 만에 인질사태 종료.
2007. 12.24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유학중인 한국 대학생 1명이 한국인이 낀 납치범들에게 납치됐다 26일 중국 공안이 범인들을 검거하면서 구조.
2007. 10.26	과테말라 거주 교민 무장괴한에 납치됐다 하루 만에 석방.
2007.11.08	아르헨티나서 1명 피랍 후 석방.

2008.01.09	과테말라서 1명 피랍 후 석방.
2008. 3.29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한국인 사업가 1명 피랍, 5월 23일 55일만에 석방.
2008. 5.31	필리핀 마닐라 북부에서 한국여성 교민1명 납치된 후 나흘만인 6월4일 석방.
2009.03.15	15일(현지시간) 예멘 남동부 하드라마우트주(州)의 고대 도시 시밤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2009.03.18	한국 정부 대응팀과 유족들은 시밤유적지 한국인 관광객 테러사건 수습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3월18일 예멘 사나공항으로 향하다 자살폭탄 공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2009.06	예멘 북부 사다에서 국제의료자원봉사단체 9명 피랍, 이 중 한국인 포함 7명 시신 발견.

*자료 : 매스컴자료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

Ⅲ. 해적집단에 의한 해외인질납치유형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⁴⁾를 비롯한 여러 국제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이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선포하였다. 특히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육지를 이용할 수 없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해상교통의 안전에 대한 인위적인 위협은 선박을 습격하여 탑승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선박이나 물건을 탈취하는 해적행위가 대표적으로 해상교통의 발달과 함께 일찍부터 나타난 것으로 지금까지도 해상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해적행위는 화물(貨物)이나 금전(金錢)뿐만 아니라, 선박자체도 대상으로 하여, 모든 국가가 이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해가 일치하여 국제관습법상 인류 공적(人類共同的 賊)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이를 나포할 수 있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법상의 범죄로 규정되었다⁵⁾. 해적의 전형적 유형은 내전이나 단속력 부족으로 국가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경계가 소홀한 지역에서 저속의 소형 화물선이나 어선들을 상대로 칼이나 몽둥이·갈고리 등 '원시적' 장비로 선원들을 위협해 소지품이나 배 안의 금고를 터는 '생계형'도 여전히 많다. 그러나 그중에는 로켓추진수류탄(로켓 발사기), 자동소총, 휴대전화, 감청기구 등 첨단장비와 정보체계를 갖추고 아예 선박을 통째로 빼앗아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선박명도 바꿔 등록하는 기업형 해적도 드물지 않으며⁶⁾,

4) 국제연합(UN) 산하의 기구.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

5) www.seapower.or.kr (검색일: 2009.3.11)

6) 1998년 9월 27일에 한국인 선원 두 명이 승선한 파나마 국적 화물선 '텐유호(2천660t급)'는 인도네시아 쿠알라탄정항을 출발한 지 3일 만에 통신이 두절된 채로 말라카 해협에서 실종되었다. 알루미늄괴 3006톤을 싣고 인천항을 향했던 이 배는 석 달 후인1998년 12월 31일, 중국의 장쑤(江蘇)성의 한 항구에서 '산에

선원, 승무원들을 납치해 세련된 협상력을 과시하며 몸값을 요구하는 테러형이 최근 늘고 있다(중앙일보, 2007.06.02).⁷⁾ 해적들은 주로 군수물자 및 암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디젤유·중유·알루미늄 등 원자재를 적재한 선박을 납치하거나(구중순, 2001: 89), 초호화여객선을 노리기도 하며 심지어는 민간보안요원이 승선한 선박마저 납치하기도 한다. 해적들은 선박을 습격하거나 도주하기에 편리하고 약탈물을 처분하기도 쉬운 해협지대나 항구가 많은 섬 지방을 주요 활동거점으로 하고 있는데 해적 출몰 주변국의 정치 불안으로 인해 해적행위는 단 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공해상의 소말리아 아덴만을 중심으로 한 위험해협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선박 및 인질납치도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운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김창준, 2009).⁸⁾

1. 해적행위 개념

해적행위에 대한 역사가 언제부터였는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3,000년 보다 더 이전부터 해적(Pirate), 해적행위(Piracy)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B.C. 140년대 로마의 역사가 Polybius에 의해 처음으로 “Pirate”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영국 최초의 사전에는 항구 내, 바다의 도둑 또는 약탈자라고 그 의미가 기록 되어졌으며, 검은 올리브유를 바른 얼룩덜룩한 검은 깃발에 허가없이 무장을 한 배를 지칭하기도 했다.⁹⁾

흔히 해적행위는 ‘해상에서 제3자의 선박이나 그 선박에 실린 물건을 약탈하는 행위’나 ‘공해에서의 폭력과 약탈로 해상운송을 위협하게 만드는 것이나 행위’로 지칭되고 있지만 해적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는 각 국가나 기관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적행위의 개념으로써 유용한 다음의 성문화 규정들과 해상보험상의 의미를 살펴보고 도록 하였다.

1)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이-1'호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다가 중국 당국에 적발되었다. 조사 결과, 텐유호 사건에는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중국 등 5개국과 연관된 국제 범죄조직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중국 공안부에서 조사 중이지만 한국인 기관장 등 실종된 선원 14명의 생사여부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일보, 2006.10.13.

7) 해적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3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 1995년부터 2006년까지 해적의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은 공식 집계로만 532명에 이른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 (검색일: 2009.02.11).

8) <http://monthlymaritimekorea.com/news/newsview.html>. (검색일: 2009.4.12)

9) “서양해적의 역사”,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 (검색일: 2006-01-03)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1982) 제101조에서는 해적행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사유(私有)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객에 의하여 사적 목적으로 (i)공해 상 다른 선박, 항공기 또는 동 선박, 항공기상의 인원이나 재산, (ii)어느 국가의 관할권 밖의 장소에 있는 선박, 항공기, 인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범행된 불법적 폭력, 억류 또는 강탈행위 (b)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적 선박 또는 항공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행위 (c) 상기의 (a) 및 (b)에 규정된 행위를 선동하거나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행위

이상의 정의에 의하면 해적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위의 목적이 사적이어야 하며, 둘째, 탈취대상은 선박 또는 항공기, 인원이나 재산이어야 하며, 셋째, 행위가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미치지 않는 공해상에서 일어나야 한다.

2) 공해에 관한 제네바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CLOS)상의 해적행위의 정의는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High Sea)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한 것인데 제네바 협약은 해적행위의 구성요건을 다음 5가지로 하고 있다.

첫째, 해적행위는 강도, 살인, 습격 또는 강탈 같은 폭력적 범죄여야 한다. 둘째, 해적행위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상에서 행해져야 한다. 셋째, 해적행위는 사유선박,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고 공용의 선박에 의해 발생되어야 한다. 넷째, 해적행위는 사유의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다섯째, 해적행위는 한 선박에서 또 다른 선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관여해야 한다(Zou Keyuan, 2000: 110).

3)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해사국(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MB)¹⁰⁾에서는 해적을 '도둑 또는 기타 범죄 행위를 의도하고 자신의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무력사용을 의도하거나 무력을 갖추고 다른 선박에 승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해사국에서는 선박이 정박 중에 행하는 절도행위와 해안으로부터의 공격에 의한 약탈, 탈취 등도 해적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상의 공해에 대한 해적행위라는 협의의 법적 정의를 초월하고 현실적으로 해적을 다루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산하의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 유일의 해적 신고 및 감시기구.

4) 해상보험법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적행위를 주로 재산상의 손실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해적행위를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적재된 화물을 탈취해가거나 선박 그 자체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비록 그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또한 해적을 다른 선박에서 침입해오는 자로 국한하지 않고 그 선박에 승선한 승객이든 해안에서 침입하는 폭도이든 해적으로 간주한다. 국제법상의 해적에 대한 정의는 국내법상의 정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각국마다 해석이 다르다. 또한 해적행위를 공해상의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한정시키고 있는데 실제의 많은 해적행위들이 영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적행위를 모든 해상에서의 행위로 확대하여 정의해야 할 것이다. 해적행위가 항해 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항구 정박 중 혹은 묘박 중에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있어 국제법상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해적행위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공해든 영해든지 간에 해상에서(항해 중, 정박 중, 묘박 중 이든지 간에) 사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력을 자행하여 해상항해를 위협하거나 승조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자’를 해적이라 하고, 선박상의 재산에 대한 탈취와 승조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모두 해적행위로 본다.

2. 해적행위의 발생원인

1990년대 이후 해상운송에 있어서 해적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연안국들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적출몰이 잦은 주요 지역은 중국남부 해안, 동남아, 서아프리카 및 인도양 주변 국가의 해역이며, 이들 해역의 공통점은 연안국들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해상 및 항만 내 치안력이 취약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해적관련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동남아해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해적행위의 유리함을 들 수 있다. 동남아해역의 경우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병목해협은 경우 목 지점에서 해적선이 은폐하고 있다가 운항선박에 발각되지 않고 몰래 접근하기 용이하다. 셋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항해 장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해적선들이 현대화되어 GPS 등의 첨단 항해 장비를 탑재하고 엔진성능도 뛰어난 고속 해적선들이 많아 일반 상선들을 쉽게 추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첨단장비를 갖춘 해적선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적관련 범죄자들이 국제적인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해준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해

택으로서 운항선박에 대한 정보입수가 용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선박의 습격에 대하여 시간, 장소, 습격 후의 행동계획 등을 계획하여 용의주도하게 해적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선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선원을 관리하는 영세한 선사들이 해적피해와 관련된 정보의 결여로 인해 선원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교육의 부재로 해적우범지역에서 조차 해적에 대한 이들 선원들의 방심 또는 무지가 해적피습을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사, 선원 등을 포함하여 관련 업체에 대해 해적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일반 상선들이 아무런 방어무기가 없이 비무장 상태로 운항을 한다는 사실도 해적들이 쉽게 선박을 피습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적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선상에 무기의 소지를 허락할 경우 이로 인해 수반되는 부작용의 위험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선원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해적피해의 유형별 발생 현황

해운에 있어서의 해적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원시적' 장비로 선원들을 위협해 소지품이나 배 안의 금고를 터는 '생계형'과 로켓추진수류탄(로켓발사기), 자동소총, 휴대전화, 감청기구 등 첨단장비로 무장하고 아예 선박을 통째로 빼앗아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선박 명도 바꿔 등록하는 기업형 해적도 많으며, 선원, 승무원들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테러형이¹¹⁾ 최근 늘고 있는 유형이다(중앙일보, 2007.06.02). 이러한 해적행위는 또한 한 지역에 집중된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소말리아와 예멘 사이의 해협과 동남아시아에 걸쳐 더욱 심각한 집중상태를 보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1) 주요 해역 별 해적피해

일반적으로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곳은 해적의 오랜 전통이나 역사를 가진 곳, 치안 질서가 취약한 곳, 경제적 빈곤이 심한 곳, 진입과 도주가 용이한 섬이 많은 곳, 상선이나 어선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해상교통로의 길목에 해당하는 해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3개국과 접해 있는 말라카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량 81%, 석탄·가스류 83%, 국내 수출입 물량 35%가 수송되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과 같은 매우 중요한 해협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해적의 피해상황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취를

11) 예를 들면, 빠르고 다루기 쉬운 선박목표물을 찾는 좀도둑들이 암시장에서 쉽게 매매될 수 있는 귀중품과 현금을 선박의 금고로부터 착취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선원들의 몸값 요구를 위해 선원들을 납치하고 선박을 나포하려는 조직화된 범죄단과 연계된 형태로도 나타난다. 2004년에 백만 달러가 넘는 몸값이 Malacca 해협에서 해적행위를 한 해적들에게 지불되었다(Hariss and Fiddler, 2005).

감추었으나 <표 3>에서 보듯이 1996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2000년도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해적 및 무장 강도에 의한 피해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1990년대 이후 동남아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피해 건수는 전체의 약 50%에 이르렀다.

<표 3> 해역별 해적피해(미수 건수 포함, 단위 : 건)

해역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동남아시아	124	92	89	161	242	153	153	170	158	102	1,444
남중국해	17	19	10	6	20	18	17	19	15	20	161
인도양	24	37	22	45	93	53	52	87	32	36	481
중남미	32	37	35	28	30	21	65	72	45	25	399
아프리카	25	46	41	55	68	85	78	93	73	80	644
기타 (이라크포함)	6	17	5	5	7	5	5	4	6	13	73
전체	228	248	202	300	469	335	370	445	329	276	3,202

*자료: 해양수산부, 『2006 해적피해예방대책』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해적퇴치 노력 및 각국의 공조¹²⁾로 인해 해적최다 출몰 지역이었던 말라카 해협 등 동남아시아 해역의 해적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해적 발생이 증가해 2007년도의 전체 해적발생 사례는 2006년도에 비해 약 10% 증가된 263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Aden)만,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 및 탄자니아 다에르살렘(Dar es Salam) 항은 연간 10차례 이상의 해적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해양수산부, 2008), 2008년도 해적피해를 입은 선박은 2007년보다 30건(11.4%) 증가한 293척으로 나타났다.¹³⁾

특히 소말리아 해역은 대부분의 사고 사례가 선박 피랍 및 선원 인질화 등 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아시아경제, 2008.2.12).

12) 이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말라카해협 연안국들의 경계순찰서비스 지속되었고, 미국이 말라카해협 감시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레이더기지 5개를 제공한데 이어 태국과 필리핀에도 레이더를 추가 제공하는 등 이 지역 해적근절을 위해 국가들의 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3) 국제해사국(IMB)의 해적피해 내용에 따르면 2008년 해적피해를 입은 293척이 중 실제 피랍된 선박은 49척이며 선박들의 몸값으로 챙긴 돈은 1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피랍선원 900명 가운데 11명이 살해당하고 21명 실종(실종자들은 대부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부상자 30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월간해양한국, 2009년4월호, No427. <http://monthlymaritimekorea.com/news/newsview.html> (검색일: 2009.4.25).

2) 공격유형별 해적피해

〈표 4〉 해적행위의 공격유형별 발생건수(단위 : 건)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승선시도	36	18	25	46	145	83	71	93	77	52	646
총기발사	6	24	11	12	6	14	13	20	13	19	138
선박승선	180	174	145	227	309	219	257	311	228	182	2,232
피랍	5	17	17	10	6	16	25	19	11	23	149
억류	-	8	4	1	2	1	-	-	-	-	16
행방불명	-	-	-	4	1	2	4	2	-	-	13
미상	1	7	-	-	-	-	-	-	-	-	8
전체	228	248	202	300	469	335	370	445	329	276	3,202

*자료 : 해양수산부, 『2006 해적피해예방대책』

1996년 이후 발생한 해적행위를 공격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승선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선박승선과 승선시도의 합이 약 90%에 이른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총기 발사와 승조원의 피랍 건수가 199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최근의 해적행위가 단순 탈취에서 벗어나 조직적이고 흉포화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을 보면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무기도 과거와 달리 총기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타 또는 미상의 무기들 대부분이 총기류를 개조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해적행위 시 사용 무기(단위 : 건)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총기류	32	71	48	54	51	73	68	100	80	80	666
도검류	23	31	40	85	132	105	136	143	95	80	870
기타	54	24	18	24	40	39	49	34	15	13	310
미상	119	122	96	137	246	118	117	168	130	103	1,356
전체	228	248	202	300	469	335	370	445	329	276	3,202

*자료 : 해양수산부, 『2006 해적피해예방대책』

4. 한국인 인질납치 피해사례

200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피해가 2006년 60건, 2007년 120건, 2008년 상반기 6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00년

이후 피랍, 강도, 총격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피해도 11건이나 되는 상황으로 해적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인에 대한 해적행위에 의한 주요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해적행위에 의한 한국인 인질납치사례

연도	선박 및 국적	한국인 선원 피해상황
1991. 03	파나마 선적 참치잡이 어선	한국인 선원 24명이 승선한 파나마 선적 참치잡이 어선이 베트남 영해 인근 해역에서 무장괴환에 의해 납치됐다가 석방되기도 했다.
1998.09.	텐유호	인도네시아에서 알루미늄피 등을 신고 인천항으로 항해 중 말라카해협에서 실종됐다. 텐유호는 석달 후 12월 산에이-1호(SANEI-1호)로 선명이 바뀐 채 중국 장쑤(江蘇)성의 한 항구에서 발견되었으나 한국인 기관장 등 선원 14명의 생사는 지금도 불명.
2000.02	글로벌마스호 (Global Mars)	한국인 8명 등 선원 18명을 태운 야자유 운반선 글로벌 마스(Global Mars)호가 태국 근해에서 해적들에게 붙잡혔다 17일 만에 풀려남.
2006.04.04	동원호	동원수산 수속 원양어선 제628호 동원호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현지 무장단체에 피랍. 선장 등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5명, 중국인 3명 등 총 선원 25명 피랍 후 117일 만에 석방.
2007.05.15	마부노1,2호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한국인 4명을 포함한 총24명의 선원이 탑승한 원양어선 2척이 무장단체에 피랍. 173일 만인 11월 4일 석방.
2007.10.28	플든노리호	아프리카 소말리아 근해에서 한국인 선원 2명 탑승한 일본 화학운반선이 해적단체에 피랍, 한국인 선원 1명은 당일 탈출, 전우성 씨는 45일 만에 석방.
2008.04.28	알렉산더칼호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던 한국 선적 화물선 알렉산더칼호가 해적단체로부터 피습, 피랍은 모면.
2008.10.10	브라이트루비호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 피랍된 '브라이트 루비(1만5000t급)' 호에 승선했던 한국인 8명 등 22명 전원이 37일 만에 모두 석방.
2008.11.15	캡스타 비너스호	일본 선박회사 소유의 파나마 국적 2만 톤 급 화물선으로 2008년 11월 중순 소말리아 아덴만 동쪽 96마일 해상에서 해적들에게 납치.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한 선원23명이 피랍 90일 만에 석방.

*자료 : 매스컴 자료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

IV. 한국인에 대한 해외인질 납치 사건의 대응방안

1. 한국인 해외인질납치사건을 통한 문제점 논의

1)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부족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재외동포와 한국기업들의 국제사업 진출, 공무 및 해외파견, 개인적

혹은 민간 차원의 해외여행 및 선교활동 등 한국인들의 국외 이동은 해마다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정치·사회·문화적 세계주의의 등장으로 민간인에 대한 국가통제력을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동안의 한국인의 인질납치테러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의 각종 인질납치테러의 위협은 더욱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사례로 2007년 마부노 1, 2호 납치사건이 사상 최악의 피랍사건으로 기록되게 된 것은 마부노호가 국가 등 제도권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¹⁴⁾ 동원호 사건 이후 해양수산부가 해적에 의한 납치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위성으로 국적 원양어선의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고 배에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알려줘 피난경로를 인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마부노호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박이 아니었다. 마부노호는 어선 수 과다로 인한 수자원 고갈을 막을 목적으로 정부가 어선을 사들여 국내 조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싼 값에 판매했던 감척어선으로 탄자니아에 적을 둔 비(非)국적 선박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부노호처럼 제도권의 보호에서 비껴난 선박과 선원이 얼마인지는 관련 업계, 정부 모두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연합뉴스, 2007.12.17).

2) 국제정치 및 한국의 총체적 외교역량 점검 필요

2004년 김선일 납치피살사건과 2007년 아프간 인질납치사태 과정에서 한국은 초기 외교역량의 한계를 체험하여야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한국인 해외인질납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적 대응력은 현저히 뒤떨어졌던 것이다. 우왕좌왕하며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의 항배에만 의존하였던 한국의 외교적 초라함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외교 역량을 돌아보고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간 인질납치 사태의 해결 과정도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것부터 해서 공식, 비공식의 다양한 루트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최종적인 협상 도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과 같은 주변국들의 동원이 주효했던 바도 있다. 사태가 장기화 되자 한국 내에서는 미국만이 사태를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며 탈레반 포로 맞교환을 거부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미국이 움직여야 한다는 미국 책임론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오늘 날 세계에서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만의 몫이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의 어느 나라든 그 몫을 나누어야 한다.¹⁵⁾ 인질

14) 2006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풀려난 동원호는 선주 동원수산이 국내 굴지의 수산회사로 협상금을 부담할 만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데 비해 마부노호 선주는 4년 전 부도를 내고 마부노 1, 2호를 구입해 재기를 노리던 개인 사업자였다. 마부노호는 선박 충돌, 침몰 등 재난에 대비해 10억 원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피랍 같은 특수한 상황을 보장하되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특약을 하지 않아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었다.

15) <http://www.nknet.org.kr>.

납치 사태와 같은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행동은 우선 인질의 안전한 석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질 가족이나 일반 국민의 정서나 여론몰이를 통해 국익과 국가 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국제정치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국제사회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분쟁지역을 둘러싼 한국의 외교역량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내외적으로 테러정책에 대해 천명하고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3) 타문화 및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이미 한국인을 테러공격 대상으로 여러 차례 천명하며¹⁶⁾ 한국이 중동 지역에서 테러 공격 대상이 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테러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차제에 15억 인구의 이슬람권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에 대해 반문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의 중심에는 현지의 종교·문화·관습을 배려하지 않은 한국 개신교의 정복주의적·팽창주의적 선교활동도 지적 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선교단 납치테러사건 이후에도 개신교는 잠시 해외선교 자제를 결의하였을 뿐 정부의 경고, 국민적 비판과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지역에 대한 해외선교를 멈추지 않고 있다¹⁷⁾. 중동지역의 한국인 불신은 비록 해외선교 뿐만 아니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유치당시 중동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중동문화원 개설을 제의하여 아랍국가 대사들과 아랍연맹 사무차장, 왕자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여 개원한 중동문화원을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을 이유로 일 년 만에 일방적으로 폐쇄를 강행하면서 중동국가들의 반발을 산 것도 마찬가지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에 대한 유엔 인권위 결의안에 한국이 기권했던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반아랍, 친유대’ 국가라는 이미지가 이슬람권에 퍼질수록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¹⁸⁾. 이와 같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 알카에다 소탕을 내세운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현지

16) <http://media.daum.net/foreign/asia/view.html?cateid=1042&newsid=20080718>. (검색: 2009. 4.30)

17) 2008년 말경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된 다케스탄 지역에 수십명의 개신교 선교단이 들어갔다 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살폭탄테러를 당한 예멘 시범지역에서도 2007년 7월 모 개신교 선교단체 소속 청소년 대표단 50명이 여름 캠프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이때 이들은 기독교 관련공연을 하고 성경과 십자가를 나누어줌으로서 현지인들을 자극했다고 한다. 이들이 떠난 뒤 시범지역 주민들은 한국 개신교 청소년 단체의 선교활동에 대한 불만을 담은 서신을 예멘 대통령에게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집트 신문들은 “외국에 나가있는 한국 비정부기구(NGO)나 한국정부가 파견한 국제협력단(KOICA) 자원봉사단원들도 기독교 선교단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내놓기까지 하였다.

<http://www.breaknews.com/index.html> (검색일: 2009.0427).

1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45589.html> (검색일: 200.3.11).

의 종교와 문화, 관습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없이 정복주의적, 팽창적, 공격적 개신교의 선교, 외교적 신의를 깨뜨리는 인천시의 반 친선적 중동문화원 폐쇄 등 외교, 군사, 종교적 아랍 무시가 국제적 테러집단인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테러집단의 공격표적으로 지목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 안전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¹⁹⁾

4) 고강도의 종합적 정보역량 필요

그동안 해외 한국인 인질납치사건을 수차례 겪으면서 해외정보능력 부재에 따른 고강도의 정보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더 이상 군사정보만을 수집하지 않는다.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해외경제정보수집 및 경제활동, 에너지 및 국가전략자원 확보, 국제범죄와의 전쟁, 환경오염 및 전염병예방 등 국민의 안전과 국익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잡식성으로 변모하고 있다. 물론 군사정보를 포함한 많은 부분을 미국의 협조 하에 있고, 국내 정보수요자들이 해외정보보다 국내정치정보를 선호하다보니 그에 따른 한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보나 국제정보능력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무지나 관심 부족은 위기 상황 때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군이 파병돼 있음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현지 정보수집능력은 대단히 제한된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들어났는데 2004년 이라크에서의 김선일씨 피랍살해사건과 2007년 아프간 인질피랍사건에서 피랍 상황, 납치 단체의 정체 및 납치 목적을 파악하고 협상 채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평소 미국, 유럽 중심의 활동에 치중하다 보니 아랍 지역에 정보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던 것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냉전 종식 후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채 인력을 줄이고 남미 지역 활동에 치중하다 9·11 사태가 터지자 급하게 아랍어 구사 인력 확충에 나서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뉴스한국, 2009.04.10).

아프간 및 소말리아 인질납치테러사건에서 보았을 때 자국민의 해외인질납치테러 발생 시 인질구출 작전의 경우 현지의 상주인원 하나도 없이 자국의 공중과 방송국에서 특파원을 파견해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외교 당국조차도 정리 및 확인되지 않은 외신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혼란을 야기하는 실정이었다. 재외 국민의 인질납치테러사건은 이제 한 국가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건의 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으로 전 세계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들과 협상 시 위협성을 더욱 감소시키고 인질의 안전귀환을 위해선 위협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역량과 위협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와 대

19) Break News, "알카에다 테러 부른 정부안일과 중동 선교", <http://www.breaknews.com/index.html> (검색일: 2009.3.19).

책이 필요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절실하다.²⁰⁾

5) 테러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대내외적 경각심 고취

2007년 아프간 한국인봉사단 인질납치사건 전 아프간에서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납치 가능성이 예고된 이후 실제로 이탈리아 언론인, 영국인 기자, 프랑스 출신 구호단체 회원 2명, 독일인 2명 등의 피랍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납치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지를 여행금지 지역이 아닌 자제지역으로 계속 지정했다. 그러는 동안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정부기구(NGO) 12단체와 방문객 등 200여 명의 한국인이 아프간을 드나들었다. 아프간에서 한국인봉사단 피랍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는 주한 아프간 대사에게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하라고 요청한 후 아프간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고,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아프간을 떠나도록 권유했다. 또한 2009년 3월 예멘 폭탄테러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여행을 기획한 여행사 측은 예멘이 여행제한국가인 것조차 몰랐고 또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여행사들에 이 같은 위험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도인 사나 지역은 '여행자제' 지역이고 폭탄테러가 발생한 시밤은 '여행제한' 지역이다.²¹⁾ 파병까지 한 분쟁 지역에 한국인의 여행 제한을 시급히 높이지 못한 정부의 미진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가 만류하고 경고한 위험 지역을 억지로 들어갔던 당사자들과 상황과 조건을 무시한 일부인들의 무분별한 언동은 국가와 국민을 얼마나 큰 곤경에 빠뜨리고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할 때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개인의 방종마저 국가에 책임지우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성립될 수 없으며, 정부의 계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시되거나 호도되어서도 안 된다.

2. 한국인 해외인질납치사건 대응방안

본 연구는 현재 국제테러리즘의 위협 속에서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에 대한 인질

20) '탈레반 한국인 납치 테러사건 : 문제점과 원칙', www.usinsideworld.com. (검색일: 2009.2.28)

21) 여행제한은 여행이 위험한 지역을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로 나눈 것 가운데 3단계 경보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를 통해 여행 시 주의사항과 국가별 정보, 위험국가의 정정불안과 치안상태, 테러위험 정보, 안전수칙, 유형별 안전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권고를 무시한 채 아프간에 입국한 사례를 계기로 여권법 개정 시행령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여행금지 국가는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해야 한다.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여행한 이들은 여권 사용이 금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ttp://www.0404.go.kr>).

납치사건의 과정과 내용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교훈을 도출하여 추후 인질납치사건의 원만한 해결, 대응방안 및 예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한국인에 대한 해외 인질납치사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첫째, 정부는 해외 관광객의 적극적인 관리 통제방안 마련과 중동 및 위험지역 교민 및 재외공관 보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테러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중동 및 이슬람 빈곤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셋째, 인질납치사건 시 관계기관의 원활한 공조체제 확립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대테러부대 강화와 전문협상단을 양성 및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2) 국제적 공조방안

첫째, 국제테러 방지와 효과적 진압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중요하며, 우선 테러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작업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며 아울러 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테러방지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국도 청해부대를 파견하여²²⁾ 해적퇴치에 국제적 공조를 하고 있지만 국제테러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3) 민간적 대응 방안

첫째, 국내 해운선사의 해로안전 확보방안으로는 해적관련 피해신고의 선행 및 의식전환, 해적관련 정보시스템의 실효성 확보, 해적대응관련 지식과 기능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개인적 대테러 안전대책 방안으로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심리적 무장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당사자들 또한 스

22) 청해부대는 2009년 3월3일 대한민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창설한 부대로 4천500t급인 DDH-976 문무대왕함 구축함, 대잠헬기 슈퍼링스 1대와 특수전 요원 UDT/SEAL으로 꾸려진 검문검색팀 30명 등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구성됐다.

3월16일부터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한국 선박 보호에 나선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임무 수행 이틀째인 3월17일 해적에 쫓기던 덴마크 국적 상선 '퓨마'(2120t)를 구조한 바 있으며, 5월4일엔 예멘 아덴 항 남쪽 37km 지점에서 해적에 쫓기던 북한 화물선 '다박솔'호를 구조했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피랍 위기에 처한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 대한민국이 북한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 첫 사례이다.

한겨레뉴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53219.html> (검색일: 2009. 5.4)

로가 안전에 유의하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4) 매스컴 보도의 신중성과 정부 공조 방안

언론은 피랍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테러집단이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인질납치 테러 사건 발생 시 정부는 인질사건 관련기관 및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언론과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언론에 의해 작전이 미리 노출된다든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가능하면 언론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언론담당관이든 현장지휘관이든 대 언론관계는 공개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이해를 구하고 협조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테러사건 대응보도는 인질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협상 과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상은 신중하게 보도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의 이성적 보도를 지향하고, 범죄 내용의 상세한 보도 등의 기준이 지켜져야만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재구성, 보완하여 우리 언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피랍 사건 보도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적인 납치나 인질, 테러에 관한 언론 보도는 인질의 생명 안전과 구출 가능성을 중시한다. 둘째, 협상과정에 대한 보도는 신중을 기하고, 납치범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셋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세한 신상정보의 공개와 클로즈업된 사진 장면의 사용 시 신중하게 대응한다. 넷째, 언론은 주관적 추측 보도와 선정적 보도를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보도와 이성적 보도를 지향한다. 다섯째, 범죄 수단이나 사건의 경과 등에 관해 필요 이상의 상세한 보도를 피하고, 잔혹한 범죄 장면이나 자극적인 현장 보도는 자제하고, 특히 이들 내용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경우 더욱 신중하게 보도한다. 이러한 피랍 보도의 가이드라인은 우리 언론의 보도 방식을 개선시켜, 피해자와 관련자의 인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방송 시청자와 신문 독자의 건강한 인식과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다(이연, 2004).

V.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인질납치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테러방지와 사건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반테러법 제정, 인질구출을 위한 특수부대 활용, 협상작전, 테러단체와 협상불가 방침 등이 있으나 아랍 및 이슬람권에 대한 군대파

병, 종교적인 입장을 적극 이해시켜 신뢰를 회복, 적대감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여행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사의 상품판매를 지도감독하고 중동국가들이 오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여행제한지역, 해외에서의 행동요령, 신변위협 시 대처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해외주재공관들의 자국민 보호 대책을 보완하고 해외공관과 해외주재상사, 언론 그리고 여행사, 교민단체 간 신변보호, 구조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협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시적절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²³⁾

해외 국민의 테러 납치사건은 이제 한 국가나 개인의 개별적인 사건의 측면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으로 전 세계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질납치를 일삼는 불법집단들과의 협상 시 위험성을 더욱 감소시키고 인질의 안전귀환을 위해선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와 대책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는 위험지역에 무방비 상태의 한국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기법연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 따를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절실하다.

테러의 무차별적인 확산 추세와 더불어 인질의 목숨을 위협하는 인질테러에 대한 대응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협조와 전담기관의 실무차원에서의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3) Break News, “알카에다 테러 부른 정부안일과 중동 선교”, <http://www.breaknews.com/index.html>.
(검색일 : 2009.3.29)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구종순(2001). “해적위험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학회지』, 제33호, 2001년 12월호 89-111.
- 김두현(2004). 『현대 테러리즘론』, 서울 : 백산출판사.
- 김창준(2009). “해적행위와 해운기업”, 『해양한국』, 2009년4월호. No427.
- 이 연(2004). “피랍자 신상보도 자제해야”. 신문과 방송, 2004년 8월호.
- 최진태(2008). “미래국제테러의 유형과 전망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학회지』, 15: 327-345.
- 최진태(1997).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 대영문화사.

2. 국외문헌

- Clutterbuck, Richard(1987), Kidnap, Hijack and Extortion: The Response, London: Macmillan
- Harris, A. and Fiddler, S. (2005). Pirates hold Maiacca Strait Shipping Hostage to Fortune. The Financial Times. June 24, pp. 2 and 16.
- Keyuan, Zou(2000). “Enforcing the Law of Piracy in the South China Sea”,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32, No.1.January.

3. 기타

- 뉴스한국, 2009.04.10
- 아시아경제, 2008.2.12
- 월간해양한국, 2009년4월호, No427.
- 해양수산부(2008). ‘2007년도 전 세계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발생 동향’
- 중앙일보, 2007.06.02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
- <http://monthlymaritimekorea.com/news/newsview.html>
- <http://media.daum.net/foreign/asia/view.html?>
- <http://www.breaknews.com/index.html>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4>
- <http://www.nknet.org.kr>.
- <http://www.0404.go.kr>
-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 www.knto.or.kr
- www.seapower.or.kr.

WWW.usinsideworld.com.

<http://www.tkb.org/GroupTacticModule.j>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

Abstract

A Study on Responses of the Korean kidnapping Terror in overseas

Jeong, Joon-Sik · Kim, Won-Ki

The 9.11 demonstrated that terrorist attack could be more serious problem than the war in our modern life. No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vaded being a target for terrorists today. As well as South Korea, the whole world must share atten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fighting against the terrorism.

Since the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have expanded their targets from Western countries to Koreans, civilian hostages are no longer other's affair: it became a serious threat to public. Increased Korean investment, trade, missionary, and travel overseas also expanded activity regions worldwide. It also result increased terrorist threats and possible abduction. The number of kidnapping crisis has increased since the terrorists use it as an effective method of sending a message.

Piracy refers to a broad range of violent acts at sea, and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common enemies. Piracy constitutes a great threat to the security of navigation as well as to the safety of vessels and crews.

Lessons from hostage issues such as Korean hostage crisis in Somalia and Afghanistan show that it can cause criticism on moral issues if armed rescue missions fail or hostages are killed, so the governments and related corporations try to solve it by paying ransom. Terrorists and use these advantages in order to put a huge pressure on the governments.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essenti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hostage abductions and recognition of national safety, lessons and solutions to previous Korean hostage cases in overseas.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 guidelines of the direction in the fighting against terrorist groups and Piracy.

Key Word : Korean Hostage Crisis in Oversea, Terror, Terrorist Groups, Pirate and Piracy, Problems, Political Response Proposals.